

# 민주, 당권개입·굴욕외교·정치검찰...尹정부 맹공 퍼부어

이재명 “이태원 참사, 책임자처벌 방안 마련”  
 박홍근 “尹, 국민의힘 아니라 윤심의힘 만들어”  
 정청래 “尹정권, 대일 굴종외교 오명 벗어나길”  
 장경태 “檢, 마녀사냥하다 국민사냥감 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수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당권개입, 대일 굴욕외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정치검찰 행태 등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성토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내용에 빠진 틈을 타 정부의 실정을 맹폭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봉장에 섰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게 대해선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조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

겠다”며 “대통령의 진술한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건네 받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은 내팽개치고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눈 밖에 난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려 당을 이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이 가장 높던 유승민을 잘라내고 툄까지 개정한 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른바 제2의 진박 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 대표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방정선군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며 전당대회 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에 불러들이며 당권주자 줄세우기에 바쁘다”며 “집권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의힘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여당 전당대회 한복판이 아니라 국민의 삶 한복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도 윤정부 때리기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전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적으로 닦힌 내우외환 극복에 온 힘 기울이기 바란다”며 “당헌 개정해 100% 당원 체육관 선거한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당헌을 다시 바꿔 대통령이 그냥 총재로 당 대표하면 될 일 아닌가. 소모적인 소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가관이다. 대통령의 줄세우기에 친윤 우두머리와 반윤 우두머리의 싸움이 거센 상태”라며 “친윤 감별사 논쟁으로 난장판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제3차 배상에 대한 굴욕 외교 비판도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피해자 스스로 셀프배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 윤석열 정권을 일컫는 말이다. 강제징용 관련 소문처럼 떠돌던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 됐다.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저지세를 넘어 바다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역장만 무너진다”고 답답해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일본이 원한다는 방식으로의 결론을 공식화한다면 정부여당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 전범 기업은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는 흔히 실령 말에 들지 않아도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고 얘기하곤 한다. 윤 정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 기업에게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한법 위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상징으로 배상 소송을 하지 않았다.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라 했다. 이 국익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익이다. 타국의 이익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 외교 끝판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정치검찰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성태 송환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다. 해

당 사건은 이미 2021년 제3차 수입료로 부풀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란 당사자 진술이 공개돼 명백히 해명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변호사비 관련 사건 중심에는 ‘윤석열 후배’라는 평가를 받는 이남석 변호사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전환사채 문제에 연루된 당사자로 알려졌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가 아닌 이재명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검찰은 마녀사냥을 이어가다가는 도리어 국민들의 사냥감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 쌍방울 내의 사임은 거 외에 쌍방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김성태가 왜 도우려고 했는지, 정치검찰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 이유를 억지로 만들고 이재명 변호사에게 변호비용 수습역원을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우길 것을 생각하면 가가 찬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尹대통령 “한국 향한 UAE 대통령의 신뢰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

### 한-UAE 정상회담서 40조원 투자 유치

다비드 대통령궁에서 가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페이스 북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인 40조원 투자 유체에 대한 글을 적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되고, 군사와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그 의미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국민 방문은 두 나라가 관계 발전에 얼마나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페이스 북을 통해 이날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만난 사실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훈련하고 작전하는 아크부대의 용기와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 이재명, ‘참좋은지방정부위 출범식’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프랑스 정치학자인 토코빌의 말을 인용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민주주의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저도 지방정부 책임자 출신이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다”며 “좀 더 작은 규모로 나눠서 즉, 분권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즉, 자치,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실현되는 장으로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실제 현장에 도입했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화 됐다”고 평가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